

‘건전 재정’ 기조 지속… 현금지원 축소 등 재량지출 10% ↓

尹정부 내년도 예산안

내년 총 지출 규모 670조 추산
반복되는 현금성 복지요구 차단
예타 등 대규모 사업 집중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재정 지출 감축, 즉,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적 현금성 지원은 없애고,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약 10조~12조원 가량 지출 다이에트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노인과 취약계층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이 수두룩해 정부로서는 '재정 완화'와 '재정 긴축' 간 정교한 정책 조정이 과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 관련 각 부처에 요구서를 청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요구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10일 출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였다.

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세수 여건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정과제를 소화하려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6%로 불어난다. GDP의 절반 이상이 나랏빚으로, 갚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더구나, 복지 지출, 국채이자 등 정부가 의무 지출해야 하는 비중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 53.3%로 늘어났다.

내년 정부가 잡은 총지출 증가율은 4.8%,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2~2026년 총지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도약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국민

-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 경제활력 제고·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확충

4대 투자 중점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드라이브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청년·취약계층 양질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경제체질 구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지역소멸대응·지방시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미래 혁신인재 양성
국민안전 경제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중추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AI 기반 과학강국 육성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류보훈·재외동포 지원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그래픽

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전 문 정부는 평균 8% 중반대 증가율이었다.

고강도 지출 감축을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현금성 복지 요구도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량 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집

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등이 대상이다. 재량 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올해 본예산 약 640조원의 46.5%인 297조3000억원 가량이 재량 지출이다. 하지만,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정부 여력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 규모는 대폭 쪼그라든다.

재량 지출에서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빼면 대략 100조~120조원, 이중 10%를 감축하면 10조~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도 손본다.

80% 가량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강화한다.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도 최소화한다. 사회보장급여 등 과다·중복 수급 등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처 간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은 집중 관리해 총사업비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예타 신청 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불요불급한 비교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여건도 개선한다.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 등 미수납 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최 차관은 "굉장히 아껴 쓰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평균 대출 65만원에 그쳐… 이자장사 지적도 GT 등 4개 라인업 운영… 2분기 사전계약

소액생계비대출

국가 대출상품에도 16%대 금리
50만원 이상시 자금용처 증빙 필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뉴시스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이지만 한도와 금리가 너무 높아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신용 취약자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초 15.9% 금리로 시작해 6개월 성실상환 시 3%포인트(p)를 우대금리를 적용해 12.9%까지 내려준다. 이후 1년 상환 시에는 9.9%까지 낮추고, 금융교육 이수 시 0.5%p까지 우대받아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상담 예약 신청이 진행됐는데, 4일간 예약 가능 인원의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 전날에는 전국 46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사전 예약된 1264건 중 일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 1126건(89%)이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문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말에 신청한 이용자들 손에는 5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병원비 영수증도 안 되고 향후 10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들 것이란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 넘게 대출이 이뤄진 건은 362건, 나머지 764건은 기본 대출금액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100만원 대출이라는 소리에 신청해서 왔는데 5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병원비 영수증도 된다는 말해 가지고 왔지만 향후 병원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출이 '긴급 생계비'란 명

분이 무색하게 최초 금리가 무려 연 15.9%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한도 역시 취약차주들에게 일시적인 숨통만 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한도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9)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왔지만 16% 이자와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급전을 구할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50만원이란 한도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면밀히 체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보완 방식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1면 '기아 EV9 앞세워...'서 계속

기아가 EV9에 핸드오프 기능을 갖춘 HDP를 적용할 경우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

또 ▲오퍼핏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대비적인 조형이 조화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공간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 ▲디지털 사이드·디지털 센터 미러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 2 ▲전자식 후드 래치를 적용한 프론트 트렁크 등 플래그십에 걸맞은 다양한 편의 사양도 적용됐다.

또 기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아는 EV9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할 신차에 ▲가죽 소재 사용 단계적 축소 ▲지속가능한 '10가지 필수 소재' 사용 ▲자연적인 소재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의 '3단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동물가죽 소재를 바이오 폴리우레탄(PU)으로 대체하고, 식물 기반의 재료를 첨가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아는 앞으로도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식물 기반 재료 사용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기아는 옥수수, 사탕수수, 천연 오일과 같은 식물 기반의 소재와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및 페트병을 원료로 한 소재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10가지 필수 소재를 향후 출시할 신차에 적용한다.

기아넥스트CMF팀 마릴리아 빌 팀장은 "자연은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는 ▲EV9(2WD·4WD)을 시작으로 추후 ▲GT-line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더해 총 4가지 라인업을 운영하고 오는 2분기 중 EV9(2WD·4WD) 구매를 희망하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EV9과 EV9 GT-line을 전시한다.

한편 기아는 중국 전기차 시장 도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공략을 위해 기아는 올해 EV5와 EV6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플래그십 전기차 SUV EV9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